
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유 영 준 (02-2100-2950)	담 당 자	송 용 민 사무관(02-2100-2953)
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 (02-2100-2650)		나 혜 영 사무관(02-2100-2953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 성 기 (02-2100-2990)		이 지 현 사무관(02-2100-2993) 권 진 웅 사무관(02-2100-2983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 (02-3145-8020)		이 명 규 팀 장(02-3145-8030)
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김 동 회 (02-3145-7580)		박 종 길 부국장(02-3145-7616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이 상 민 (02-3145-7550)		박 형 근 팀 장(02-3145-7552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 영 주 (02-3145-6770)		전 홍 균 팀 장(02-3145-6775)

## 제 목 : 새해부터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가 신속해 집니다.

### - 약관 신고 절차 개선 등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◆ 금융회사가 개별 약관 제정·개정시 금융당국 등에 신고하는 절차가 '원칙 사전신고'에서 '원칙 사후보고'로 전환
- 기존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,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인 경우가 아닌 한 **상품출시 후 보고 가능** (네거티브(Negative) 규제 전환)

## I 추진 배경

- 금융당국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,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,
  -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·개정시 신고절차를 현재 '원칙 사전 신고/예외 사후보고'에서 '원칙 사후보고/예외 사전신고'로 전환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.
  - 이러한 내용을 담은 4개 법률 개정안\*이 국회를 통과하여 '20.1.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.

\* 은행법, 자본시장법, 저축은행법, 여전법 공동 개정('18.12.31)

**<약관 관련 법률 개정('20.1.1시행) 내용 (은행법 예시) >**

개정 前	개정 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원칙) <b>사전신고</b></li> <li>• (예외) 아래사항 <b>사후보고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<u>금융위가 정하는 경우</u>*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원칙) <b>사후보고</b></li> <li>• (예외) 아래사항 <b>사전신고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/u></li> </ul> </li> </ul>

\* ①이용자의 권익 확대, 의무 축소를 위한 약관 개정, ②기 보고된 약관 내용과 동일,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, ③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

○ 금융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“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”에 대한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,

-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(12.4), 법제처 심사(12.16), 차관회의 의결(12.20)을 거쳐 오늘(12.24)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
## II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 [시행령 개정안\* 주요내용]

\* 은행법·자본시장법·저축은행법·여전법 시행령 개정안

□ (기준)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①제도 개편 취지, ②소비자 보호와의 조화, ③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감안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
①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,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 등 법률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심사 대상을 축소했습니다.

②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기존 이용자의 신뢰보호,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피해 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심사 대상으로 유지했습니다.

③ 업권간의 규제차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권의 사전신고 대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.

□ (대상) 다음의 경우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.

①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\*하는 경우

\*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신고로 운영

※ 단 법률 개정 취지와 신용카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관 제정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(포인트, 제휴할인 등)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

②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,

- (i) (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는) 기존 이용자\*에게 적용하려는 경우

\* 개정 전 약관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,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범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

- (ii)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

③ 다만, 제도변경으로 현재 사후보고대상이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 인정(①, ②에 해당하더라도 i)~iv)는 사후보고 대상)

\* i) 금융위에 신고·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·유사한 약관의 제·개정

ii) 법령의 제·개정에 따른 약관의 제·개정

iii) 금융위의 명령 또는 변경권고에 따른 약관의 제·개정

iv)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르는 약관의 제·개정

### III 그 밖의 시행령 개정 내용

#### 1. 은행법 시행령 개정사항

□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“불공정영업행위(은행법 제52조의2)” 중 하나로 추가하여 금지하였습니다.

- 차주가 제공한 정보,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\* 과태료 부과 및 은행 및 임·직원 제재 가능

\* 다만,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이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

## 2.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

-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(RP) 대상증권에 추가하였습니다.

- (현행) 대고객 RP의 경우 국채 등 高신용채권,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채권, A등급 이상 외국 국채(증권신고서 면제)만 편입 가능
- (개정) 일정 요건\*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\*\* 대상에 포함

\*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을 것, 투자매매·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발행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등(현행 외국 국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요건과 동일)

\*\* 대고객RP는 거래특성상 담보교체가 즉시 가능해야 하므로 매출신고서 면제가 필요

-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(RP)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.

- (현행) RP거래시 담보증권의 역할과 차환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근거규정이 부재
- (개정)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·적용하고, RP 매도자는 일정수준\*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

\*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 예정(20%)

## IV 향후 계획

□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4개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'20.1.1일에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.

\* 단, 기관간 RP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○ 금융당국은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금융권에 안내\*하는 한편, 향후 취지에 부합하게 실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.

\* 금융권 대상 설명회 개최, '약관 작성·운영 매뉴얼' 제작·배포 등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